

미·일 경제관계가 한·미 FTA 협상에 주는 시사점

정 성 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주요 내용

-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국가인 일본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 일본은 미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한·미 FTA 협상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미·일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미·일간 경제협력 채널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있음.
 - 미·일간 경제협력 채널로서는 1989년에 시작된 「미·일 구조문제협약」, 1993년의 「미·일 포괄경제협약」, 그리고 2001년의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 등이 있음.
 - 미·일 양국은 이러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 경쟁정책, 규제 완화, 재정·금융 등 FTA 협상에서 교섭대상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일본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일본이 미국과의 FTA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이 한·미 FTA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임.
 - 둘째,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과 더불어 미·일 FTA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미·일 양국에서도 고조되고 있다는 점임.
 - 셋째, 미·일 경제관계 심화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FTA 혹은 경제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은 중장기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의 고도화라는 점임.

1. 서론

- 최근 한·미 FTA 협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미국과의 FTA 협상 체결에 대한 동향이 관심을 끌고 있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조차 미국과 협상을 꺼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굳이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10월 중의원 「국가기본정책위원회 합동 심의회」에서의 당수 토론회에서 “미·일 FTA 교섭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그러한 단계에 들어서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 이러한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임.
- 그러나 일본정부가 미·일 FTA에 소극적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으로부터 한·미 FTA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미·일 경제관계에 대한 사실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
- 미·일 경제는 사실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미·일 양국은 이미 지난 1980년대 말부터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수많은 경제협의를 통해 양국간의 무역장벽, 투자장벽, 제도적 차이를 해소해왔음.
- 본고는 미·일 경제관계 심화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미·일 경제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를 불식하고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논쟁에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미·일 경제협의 채널의 개요

- 미·일 경제협의의 역사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미국의 압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경제구조의 지속적인 개혁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음.

- 1980년대 마일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양자협의를 1989년 「미·일 구조문제협약」, 1993년 「미·일 포괄경제협약」 등을 거쳐 2001년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으로 발전하여 왔음.
- 이러한 양자협약은 무역불균형 개선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일방적 구조개혁 요구가 핵심을 이루고 있었음.
- 그러나 미·일 양자협약에는 점차 일본의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 문제도 협의대상에 포함되면서 양국 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음.
- 미·일 양자협약은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고 최혜국대우(MFN)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와 차별성을 가지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미·일 양자협약은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첫째, 양국간 교섭에 의해 교섭대상 및 합의내용이 결정된다는 점.
- 둘째, 수출입 등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정책, 재정·금융 정책, 규제 완화, 정부조달 등 포괄적인 분야가 교섭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 셋째, 합의된 내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확실한 추진을 체크하는 집행체제(enforcement mechanism)가 형성된다는 점.
- 미·일 경제협약을 통한 일본의 구조개혁에 대해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요구까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일본내의 반발이 많았으나 현재는 「일본의 시장경제제도 발전에 미·일 경제협약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1989년에 개시된 「미·일 구조문제협약」 과정에 당시 통산성 실무자로서 활약한 일본 게이오 대학의 와카스기 교수는 “미·일 경제협약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FTA 협정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였음(2006년 8월 17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 위의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일본은 이미 미국과 FTA 협상에서 다루어질 이슈들을 상호간에 토론하고 국내제도를 개혁하는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 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임.

- 이 점이 일본이 미국과의 FTA 협상에 소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
- 또한 일본은 지난 17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에 따라 일본시장을 미국에 거의 개방하고 있음. 예를 들면 2003년 대미 수입액 6조 8,250억 엔 중 78.7%가 무관세임.
- ※ 수입품목의 구성에 따라 각국에 대한 일본의 무세화 비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 일본의 대미 수입은 주로 반도체, 항공기, 원동기(터보제트, 가스터빈 등) 등 이미 무세화가 이루어진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미 수입의 무세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의 대미 수출 13조 4,122억 엔(2003년)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임. 미국은 아직도 일부 제조업 품목에 대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미국 제조업계는 일본과의 FTA에 대해 소극적이었음.
- 일본정부는 관세 이외의 제도분야, 즉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환경, 투자, 조세, 서비스 등 양국 제도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음.
- 그리고 미·일 양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확립하고 있음.
- 다음에서는 미·일 양국의 경제문제를 협의하는 중요한 채널들을 소개하고자 함.

3. 「미·일 구조문제협의」

- 미·일 양국의 경제구조를 둘러싼 양자협의를 주지하듯이 양국간 무역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음.
- 1960년대 이래 일본의 고도성장은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에 기반을 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섬유,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일 양국간의 무역마찰이 1980년대에 극에 달하게 되었음.
- 이러한 무역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분야별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협의를 해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음.

-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급격한 엔고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520억 달러에 달하였음.
- 미국정부는 마일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폐쇄적인 일본시장의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그 시작이 바로 1989년부터 시작된 「미·일 구조문제협약」임.
- 1989년에 개최된 마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양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요인을 추출하여 이를 시정하는 양자협약의 개시에 합의하였음.
- 일본정부는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서 저축투자 패턴, 기업의 투자활동과 경쟁력, 기업행동 등 7개 항목을 지적하면서 개인저축률 향상, 재정적자 삭감을 요구하였음. 즉 미국은 저축률이 낮고 기업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역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주장이었음.
- 한편 미국정부는 저축투자 패턴, 유통, 배타적 거래 관행 등 6개 항목을 지적하면서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 미·일 구조문제협약의 5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0년 6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일본의 주요 구조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저축투자 패턴 개선
- 일본은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마일간의 무역불균형은 이러한 구조에 기인함.
- 따라서 일본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은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임. 내수 확대를 위해 일본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자본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함. 일본정부는 이후 10년간 430조 엔의 공공투자를 약속함.

■ 유통

- 일본의 폐쇄적 유통구조의 개선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공항·항만 등 정비 촉진, △통관절차·수입절차의 간소화 △유통규제완화(대형점포법 개정) △유통과정에서의 상관행 개선(경쟁 촉진, 시장개방 확보) △일본의 수입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유통시장의 효율화 정책 추진 등의 조치를 약속하였음.
- 이 중에서도 대형점포의 개점, 기존 대형점포의 확장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매유통업의 경쟁을 촉진하게 된 점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

■ 독점금지법의 개정에 의한 배타적 상거래 개혁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재의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간의 계열화, 유착관계의 형성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법제도 개정에 착수하였음.

- 이외에도 지속적인 수입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추진되었음. 이상의 조치(일본 국내법 개정 동반)들을 통해, 계열적 유통구조의 개선, 독점적 상거래 개선에 의한 경쟁 촉진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4. 「미·일 포괄경제협약」

- 「미·일 구조문제협약」 이후 미·일간의 새로운 경제협약체로서 1993년 「미·일간 신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기본 틀」 (「미·일 포괄경제협약」)이 발표되면서 미·일간의 구조적 문제협약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이 협약체가 출범한 이유는 「미·일 구조문제협약」 이후 미국이 의도한 무역불균형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미·일 포괄경제협약」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연 2회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하면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조개

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는 점임.

- 둘째, 일본 경상수지 자의 충분한 삭감을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일 구조문제협 의」보다 훨씬 포괄적인 분야를 협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임.
- 양국 정부는 양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협의대상 으로 포함하였음.
- 셋째, 양국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최혜국대우(MFN)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공정 하게 적용됨. 이는 양국간의 배타적 우대조치인 FTA보다 훨씬 큰 개방효과를 가지게 됨.

■ 정부조달

- 일본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단행하였음. 특히 컴퓨터, 슈퍼컴퓨터, 위성, 의 료기술, 전기통신 등 미국기업이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조달시장을 미국기업에 개방하였음.

※ 전기통신 및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1994년 11월 양국간 합의문서가 작성되었음.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usa/keizai/framework/>)

■ 규제 완화 및 경쟁

- 경쟁력 있는 외국제품 및 서비스가 일본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본정부의 법령, 행 정지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대표적인 분야는 금융서비스, 보험, 경쟁정책, 유통분야 등임.

※ 보험에 대해서는 1994년 10월에,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1995년 1월에 양국간 합의문서가 작성되었음.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usa/keizai/framework/>)

■ 기타 주요 부문

- 이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개방임.
- 미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대일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본 국내 및 해외진출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산 부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음.
- 또한 미국기업의 판매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의 제거를 요구하였음.

※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1995년 8월에 양국간 합의문서가 작성되었음.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usa/keizai/framework/>)

■ 경제적 조화

-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대내 직접투자임. 미국의 대일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것이 이 분야의 최대의 목적임.
-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술에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의 제거 등이 논의되어왔고 제도개혁이 추진되었음.

■ 지구적 규모의 공통과제(common agenda)

- 「미·일 포괄경제협정」의 중요한 특징은 미·일 경제 이외의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구조개혁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음.
- 대표적인 의제로는 환경, 기술협력, 인적자원 개발, 에이즈 등이 있음.

■ 구체적 협의 프로세스

- 먼저 위에서 제시한 각 분야별로 교섭팀을 조직하고 운영함. 교섭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설정함.

- 다음으로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차관급 회의(연 2회, 추가회의 설정 가능)를 개최하여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함.
- 마지막으로 미·일 정상회담(연 2회)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의 각 분야별 과제, 구조문제, 거시경제문제, 나아가 지구적 문제 등 공통과제에 대해 성과와 금후의 개혁과제를 대외적으로 공표함.

5.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

- 미·일 경제협의 채널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 더욱 포괄적이고 협조적으로 재편되었음.
- 2001년 6월 미·일 정상은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파트너십」에 합의하고, 「미·일 포괄경제 협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 미·일간의 경제협의체제를 구축하였음.
- 이 협의체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양국간에 어떠한 경제마찰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지극히 포괄적인 협의체제라고 평가하고 있음.
- 미·일 차관급 경제대화
- 여기에서는 미·일 경제파트너십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이 회의는 최소한 연 1회 개최하고 미·일간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적 및 다국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함.
- 경제문제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거시경제문제, 구조개혁 및 규제개혁, 금융기관 및 기업개혁 등에 대해 현황을 검토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함.
-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개혁 이니셔티브)
- 1997년 6월에 미·일 공동성명에 의해 설치된 「규제 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강화된 이니셔티브」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경쟁 강화 및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4개의 분야별 실무그룹(working group), 1개의 분야 횡단적 실무그룹을 가지고 있음.

- 분야별 실무그룹으로서는 △전기통신 △정보기술 △에너지 △의료기기·의약품 실무그룹이 있음.
- 분야 횡단적 실무그룹은 경쟁정책, 투명성, 법제도 개혁, 상법개정문제, 유통, 통관절차, 비즈니스 원활화 등 분야별 실무그룹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함.

■ 재무금융대화

- 일본의 재무성 및 금융청, 미국의 재무성이 참여하는 포럼으로서 재정, 금융(예: 부실채권문제)에 관련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짐.
- 특히 금융 실무그룹에서는 경쟁적인 금융시장의 형성, 은행·증권 부문의 강화, 기타 금융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함.

■ 투자 이니셔티브

- 이것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투자환경과 관련된 법령 개정 등을 논의하며,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투명성, 파산, 노동유연성, 토지시장 유동성 등 투자와 관련된 중요 문제들을 논의함.

■ 무역포럼

- 이것은 미·일 양국간에 발생한 무역문제에 관한 조기경보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함.
- 즉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화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일 양국은 1989년 이후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무역불균형 해소에 장애가 되는 양국의 구조적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채널을

거의 20년 가까이 가동하고 있음.

- 이러한 미·일 양국의 구조개혁 성과는 단지 마일 양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배타적 특징을 가지는 미·일 FTA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일본이 미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일간에 충분한 경제협회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이 일본과의 FTA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임.

- 미 무역대표부 차석대표인 카란 바티아(Karan K. Bhatia)는 일본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2006년 4월 4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현 시점에서 미국정부내에 미·일 FTA를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FTA 대상국에 비해 미·일 경제관계는 이미 상당히 긴밀합니다. FTA는 양국간 관계의 깊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대일 정책에서는 특정분야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일 양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일본의 농업개방 의지에 대한 불신과 미국 제조업에 대한 충격을 우려하여 일본과의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의 시장 확보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일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인 프레드 버그스텐(C. Fred Bergsten)은 일본이 농업개방에 응한다면 미국정부가 마일 FTA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일본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 2004년 5월 13일자).

- 주일 미국대사인 토마스 시퍼(J. Thomas Schieffer)는 미·일 FTA에 대해 “경제자유화는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일 FTA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였음(『일본경제신문』, 2006년 2월 16일자).

- 한편 일본은 한국의 FTA 협상 개시와 특히 미·중 FTA 체결의 가능성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게이오대학의 와카스기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일본정부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미·일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음.
- 미·일 재계회의는 2005년부터 미·일 FTA의 체결을 양국 정부에 제안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음.
- 2000년에 개최된 미·일 재계회의에서는 일본측 대표에 의해 미·일 FTA가 제안되기 시작하였지만, 미국 재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냉담한 편이었음.
- 그러나 2005년 이후 미국 재계의 반응은 완전히 변화되었음. 이때부터 미국 재계는 일본 재계와 더불어 미·일 FTA의 실현을 양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일본이 미·일 FTA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이 한·미 FTA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임.
- 일본은 사실상 1980년대 말부터 FTA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미·일 경제협의를 20년 가까이 추진해왔음. 이 과정에서 일본경제는 끊임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왔고, 이러한 개혁은 일본의 시장경제시스템을 한층 고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둘째,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관심이 일치되면서 미·일 FTA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미·일 양국에서 고조되고 있다는 점임.
- 셋째, 미·일 경제관계 심화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FTA 혹은 경제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은 중장기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의 고도화라는 점임.
- 단기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FTA 협정을 체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경제시스템이 안고 있는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한·미 FTA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미·일 구조문제협약」 등의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교훈임.

부 록

미·일경제관계연표(1970년대 이후)

1970년	미·일 섬유교섭 개시
1972년	미·일 섬유협정 조인, 일본, 제2차 철강자주수출규제(1972. 1~1974. 12)
1973년	GATT, 도쿄라운드 교섭개시
1977년	미·일 컬러텔레비전 OMA(시장질서 유지) 협정체결
1978년	쇠고기, 오렌지 교섭 완료(수입확대로)
1979년	GATT, 도쿄라운드 교섭 개시
1980년	NTT조달계약 책정 (1999년에 실효)
1981년	일본, 대미 자동차 수출자주규제 실시(1981. 4~1984. 3)
1985년	나카소네·레이건 합의, MOSS 협의(시장지향형 분야별 협의) 개시 (전자공학, 전기통신, 의약품, 의료기기, 임산물, 수송기기의 각 분야) 미 반도체 공업계, 일본 반도체시장의 폐쇄성 등을 이유로 301조 제소 9월 플라자 합의
1986년	MOSS 협의(전자공학, 전기통신, 의약품, 의료기기, 임산물 분야) 완료 GATT, 우루과이라운드 교섭 개시 9월 미·일 반도체 약정 체결
1987년	일본, 공작기계의 대미 수출자주규제 실시(1987~1993. 10)
1988년	쇠고기, 오렌지 교섭 최종 완료 (수입할당 철폐로)
1989년	6월 이동전화 교섭 완료 미·일 구조협정의(SII) 개시 일본 측: 저축투자패턴, 토지 이용, 유통기구, 가격메커니즘, 계열, 배타적 거래 관행 미국 측: 저축투자패턴, 기업의 투자활동과 생산력, 정부규제, 수출진흥 USTR, 일본의 건설시장(301조), 전기통신(1988년 포괄통상법1371~1382조), 인공위성정부조달(슈퍼 301조), 슈퍼컴퓨터 정부조달(슈퍼 301조), 목재수입에 대한 기술 장벽(수퍼301조)을 표적으로(건설, 전기통신은 최종적으로 94 년 그 외에 1989~90년에 걸쳐 합의)
1990년	SII 최종보고
1991년	6월 새로운 미·일 반도체 협의 개시(기한 1996년 7월 말)
1992년	미·일 공작기계 교섭 최종 완료
1993년	클린턴·미야자와 총리간에 미·일포괄경제협의 개시에 관한 합의 →1994년 8월, 지적소유권분야 완료 10월, 정부조달, 보험 분야 완료 12월, 관유리분야 완료 (1999년 말에 조치 종료) 1995년 1월, 금융서비스분야 완료 6월, 투자기업간 관계 분야 및 자동차, 동 부품 협의 완료 (2000년 6월에 조치 종료) 1996년 12월, 보험문제 최종 완료

1994년	3월, 이동전화(89년 합의 위반) 완료
1996년	GATT, 우루과이라운드 교섭 종결, WTO 설립으로
1997년	8월, 반도체문제 완료 6월, 하시모토·클린턴간에 미·일 규제완화대화에 대해 합의 (규제 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해 미·일간의 강화된 이니셔티브)
1998년	9월, NTT 조달약속의 개선, 연장
1999년	5월, 하시모토·클린턴회담에서 미·일 규제완화대화에 대해 공동현상보고 발표 5월, 오부치·클린턴회담에서 규제완화대화에 관한 제2회 공동현상보고 발표 7월, NTT 재편성에 따라, NTT 조달 약정이 실효, 간소화된 조치에 2년 실시로 완료
2000년	7월, 모리·클린턴회담에서 규제완화대화에 관한 제3회 공동현상보고발표
2001년	6월, 고이즈미·부시회담에서 규제완화대화에 관한 제4회 공동현상보고 발표와 동시에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 파트너십」에 합의 (직후, 미·일 규제완화대화를 발전시킨 「미·일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 프로세스 개시) 「성장을 위한 마일 경제 파트너십」 차관급 경제대화, 관민회의,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 재무금융대화, 투자 이니셔티브, 무역포럼의 6가지 틀로 구성 6월, NTT 조달약정에 관한 간소화된 조치를 종료, 약정의 완전한 실효를 확인 10월, 마일자동차협업그룹(ACG) 설치를 위한 서한을 마일간에 교환
2002년	6월, 고이즈미·부시 회담에서 규제개혁 이니셔티브 제1회 보고서 발표
2003년	5월, 고이즈미·부시 회담에서 규제개혁이니셔티브 제 2회 보고서 발표